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부 경 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실 실장

## New &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Kyung-Jin Boo

Head, Division of New & Renewable Energy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665-1, Naeson-dong, Euiwang-si Kyunggi-do, Korea. 437-713

### 요 약

정부는 1970년 1,2차 석유과동을 겪으면서 석유를 대신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1987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R&D 중심으로 개발에 착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하여 대중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였음. 2000년대 들어와 고유가의 장기추세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의 대두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크게 고조됨에 따라 2004년을 신·재생에너지 원년으로 삼아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함. 이를 위해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도까지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70-90%에 근접시키고 보급목표도 5%로 설정함. 이의 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예산도 대폭적으로 확대함.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확보된 정부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까지 15년간의 지원액을 훨씬 능가하는 약 1조 3천억원에 이룸.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이 2001년 1.5%에서 2007년 2.4%로 확대됨.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과 보급수준이 선진국 평균에 크게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신·재생에너지가 태생적으로 경제성이 부족한데 기인함. 또한 수급구조적 문제로서 원별로 살펴보면 2006년의 경우, 폐기물이 대부분(75%)를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나머지 부분도 수력이 16.4%를 차지하여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등 자연 재생에너지원은 10% 미만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름.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도 국내의 기술수준 및 국내 산업이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보급물량의 상당부분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할 연구인력과 기초 인프라도 열악한 상태여서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재원조달의 경우도 당초 제2차 기본계획에서 산정된 투자재원 규모를 하회하고 있음 (계획대비 예산 확보 실적이 63% 수준에 머물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초고유가의 지속과 제2차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 정부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실적인 국내외 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한 공급목표의 재설정과 전략방향의 선회, 그리고 구체적 실행계획의 수정을 계획하게 됨. 현재 작업 중인 제3차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을 중기(2012년), 장기(2018년), 초장기(2030년)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공급목표(양적 목표, 질적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산업화 촉진을 내세우고, 기본방향으로서, 에너지가치체계의 재확립,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개발, 시장확대 정책의 재점검하여 기술개발의 방향과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수출화가 상호연계되도록하여 제한된 국가자원을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